

어촌관광 시대의 바다낚시 현황과 전망



김 국 료
월간 「낚시춘추」 전무이사

어촌 소득증대의 새로운 수익 모델 필요성 대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문제로 온 나라가 긴장 상태이다. 농축산 분야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수산 분야야말로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진 지 이미 오래다.

1994년, 세계 각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선포되면서부터 우리나라는 먼바다 황금어장을 잃기 시작했고, 어선 규모를 포함한 수산업 전체의 구조 조정마저 불가피한 실정에 처했다.

우리의 연안 어장 또한 예외가 아니다. 무분별하게 자행돼 온 불법어로와 남획으로 인해 오징어와 같은 일부 어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족자원이 고갈된 상태이다. '기르는 어업'의 정부시책 아래 80년대 중반부터 발전을 거듭해 온 어류 양식업 역시 해가 갈수록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추세다. 날로 상승하는 사료 가격, 거듭되는 어병(魚病) 문제, 이와 함께 여름이면 연례행사처럼 찾아드는 적조(赤潮) 피해 등이 원인이다.

어민들을 실의에 빠지게 하는 것은 이런 이유들 뿐만이 아니다. 애써 기르고, 애써 조업해 잡은 고기를 인건비조차 못 받고 팔게 되었을 때, 어민들은 망연자실해 한다. 국내의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은 차치하고, 중국에서 밀려드는 값싼 양식어종은 이제 우리나라 연안어업의 존재 기반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분명 우리나라 어촌·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새로운 수익 모

델이 제시돼야 할 시점에 이르렀는데, 최근 해양수산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추진되고 있는 시책 가운데 하나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리 바다와 우리 어촌을 관광 자원화 하자'는 취지의 어촌관광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낚시는 어촌관광사업의 확실한 수익 모델

어촌관광사업 추진의 목적은 어민들 뿐만 아니라,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어촌 주민 모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어촌의 관광자원 또한 지금까지의 자연경관 뿐 아니라, 그 해역의 어자원 및 수산동식물 모두를 포함한다.

그런데 많은 어민들은 자연경관은 몰라도, 자신들의 바다에서 나는 동식물, 특히 어자원만큼은 자신들 어민의 몫이며, 그래서 자신들의 소득원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물론 어자원 소득의 최우선 수혜자가 어민들이란 점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어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의 방식이다. 이를 위해선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과 미래지향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두에서 제기했듯이 어민들은 연안 어자원이 날로 고갈돼는 환경에서 어획고의 감소 추세를 인력으로 돌이킬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양식어업 또한 각종 자연재해와 값싼 수입산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그 누구보다

피부로 느끼고 있다. 따라서 어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시장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어종에 대해서는 어업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관광자원, 즉 낚시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한정된 자원을 어느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은 것인지를 판단하여 수익이 높은 쪽으로 이용하자는 것이다.

하루 종일 파도에 시달리며 애써 잡은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아야 그 수입이 낚시인 2~3명 태워 즐기게 해주는 대가만큼 못하다면, 그 어종은 철저히 관리하면서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자원보호 측면에서나 어업인의 소득 측면에서나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이들 어자원을 통해 낚시객들로부터 취하는 관광 소득이 낚시배 등 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어민들뿐만 아니라, 숙박업을 비롯한 각종 판매업을 하는 어촌 주민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될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게다가 우리나라 바다낚시 인구의 최근 출조 패턴이 '가족 동반 여행'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간파해야 할 것으로 본다. 과거처럼 한 보따리 이고 지고 섬으로 들어가 낚을거리만 고기를 낚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그렇게 낚을 고기도 없지만), 가족과 함께 가볍게 떠나 가까운 곳에서 부담 없이 즐기다가 가볍게 돌아오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가. 주5일제 이후 뚜렷해진 이 같은 현상은 한 마디로 "먼 곳을 찾아 어렵사리 큰 고기 한 마리를 노리는 것보다 가까운 해변에서 작은 고기일망정 손쉽게 낚아 가족끼리 즉석에서 즐겁게 요리해 먹고 돌아온다"는 취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얼핏 보면 일반 관광객과 낚시객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그냥 바닷가를 스쳐 지나가는 일반 여행객 들조차 현지 여건에 따라선 얼마든지 낚시객으로 돌변(?)할 수 있고, 이들을 겨냥한 현지 어촌의 준비만 이뤄진다면 얼마든지 낚시 행위에 따른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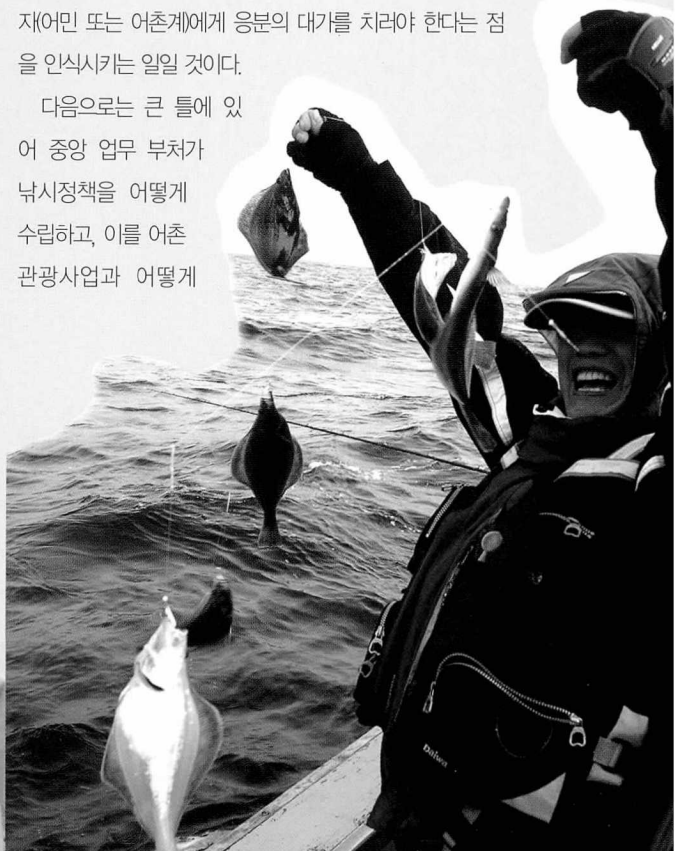
어민과 낚시인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정책 수립을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에서 펼치고 있는 어촌관광사업 분야가 '낚시 체험 관광'을 포함시키고 있는 점은 매우 시의적절하고도 현실성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

그러나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일방적 정책 수립과 일방적 시행에 대한 우려이다.

면밀히 검토한 좋은 정책일지라도 사전 홍보가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우선 어민들에 대한 정책 홍보이다. 앞서 거론했듯이 어자원의 유용가치를 높이는 데 따른 어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낚시인들에 대한 정책 홍보로서, 모든 어자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유형의 자산이며, 국가는 그 관리권을 어민들에게 최우선으로 부여할 수 있고, 따라서 낚시인들은 국가 자산(고기)을 취득하는 데 있어 위탁관리권 자(어민 또는 어촌계)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일일 것이다.

다음으로는 큰 틀에 있어 중앙 업무 부처가 낚시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이를 어촌 관광사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다.

우선 큰 틀의 낚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앙부처가 오랫동안 너무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까지 갑론을박하던 '낚시 허가제' 또는 '낚시 관리제'가 대표적 사례 중의 하나다. 국민 모두가 낚시를 하기 위해선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요지의 이 제도는 연구 과정에서부터 논란을 빚을 수 밖에 없었는데, 우선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국민 자율권 침해와 타분야 레저와의 형평성 문제점을 지적 받았다. 이 법안은 논의 과정에서 많은 낚시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그 본질이 훼손되고 말았다.

따라서 낚시에 대한 간섭과 규제보다는 오히려 활성화 정책이 어촌관광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낚시의 기여도를 높이는 구체적 방안은 유료화가 그 대안이 될 것으로 본다. 즉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이고도 효과적인 낚시어자원 및 낚시터 시설물을 조성하고, 그 관리권을 지역 어촌계에 위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해당 어촌계는 낚시터를 유료(有料)로 운영하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재투자하여 쾌적한 환경과 쓸쓸한 손맛을 제공하게 된다면 낚시인들 또한 응분의 입어로 지불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어자원 조성 and 유료 낚시터 조성에 관한 문제이다. 어떤 어자원을 어떻게 조성하고, 낚시터는 기존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새로운 축조물에는 어떤 시설을 가미해야 할 것인가?

이에 앞서 우리의 어자원 조성 실태에 대한 낚시인으로서의 소회를 잠시 밝혔으면 한다.

꾸준한 방류사업으로 조피볼락(우럭)자원이 늘어난 서해 각지의 포구에는 휴일이면 낚시객들로 넘친다.



어자원 증대의 주력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어자원 방류사업은 지금까지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 사업자 및 일부 민간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산하의 국립수산물종묘시험장 12개소에서 1976년부터 방류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1996년부터 시설된 도립종묘배양장 6개소와 지자체 배양장 7개소 외 민간 사업자로부터 생산된 종묘 또한 방류사업에 이용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 종묘 방류사업은 넙치·참돔·감성돔·돌돔 등 어류 17종, 전복을 비롯한 패류 7종, 보리새우·대하 등의 갑각류 4종, 기타 6종으로 총 34종에 이른다. 그리하여 1976년부터 2001년까지의 방류량은 총 330백만마리로 집계되고 있다(이상 2003년도 자료 기준).

어업인들은 물론 낚시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우선 방류어종이 너무 단순하다는 느낌이며, 또한 방류사업에 대한 효과 조사를 발표한 자료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적기와 적소를 찾아 적정 어종을 방류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방류용 종묘는 별도의 중간육성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육상 배양장에서 생산된 종묘가 공장 자연상태계로 방류되는 사례를 여러 차례 목격했을 때, 과연 저 치어들이 포식자들의 먹이가 되지 않고 얼마나 살아남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낚시인들이 방류사업의 효과에 대해 확신하는 어종은 서해안 지역의 조피볼락(우럭)과 남해동부 일부 지역의 볼락 자원 증대이다. 그리고 이들 어종에 대한 배낚시 인구는 매년 증가 추세일 뿐만 아니라, 조황 또한 낚시인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었으면 한다. 게다가 이들 방류 어종으로 인한 배낚시 인구 증가 외에도, 난류의 복상으로 인한 방어·부시리·삼치 등의 회유어종과 오징어·주꾸미 등의 두족류 증가 또한 새로운 바다낚시 인구를 불러 모으고 있다는 점을 첨언하고 싶다.

결국 이런 점에서 볼 때 갈수록 고갈돼 가는 내수면 낚시 어자원과는 달리, 바다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낚시객들의 손맛과 입맛을 돋구어주기에 충분하고, 이로써 낚시를 유력한 수익 모델로 삼는 어촌관광사업은 그 발전 가능성이 한층 높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어촌관광사업과 연계한 낚시터 조성 분야일 것 같다.

이제는 정부와 지방자치제에서 관심 보일 차례

지난 2004년 한국갤럽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낚시인구는 약 570만 명, 이 가운데 민물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66%, 바다낚시를 즐기는 인구는 전체 34%인 195만 명으로 발표되었다.

3면이 바다라고는 하나, 우리나라 낚시 인구 가운데 34%가 바다낚시를 즐긴다는 점은 실로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과거의 조사 자료가 없어 그 수치의 변동을 정확히 예로 들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 낚시 인구를 통상 400만 명으로 추산하던 1980년대까지만 해도 바다낚시 인구 비율을 10% 안팎으로 보고 있었다. 이로부터 20년 사이, 전체 낚시인구가 42.5% 증가한 것에 비해, 바다낚시 인구는 거의 5배나 증가한 셈이 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바다낚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내수면에 이어 바다에도 유료낚시터가 생겨난지 이미 오래고, 그 양상 또한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염전을 활용한 양어장 형태와 함께 연안 가두리 양식장 시설을 활용한 뗏목형 낚시터, 그리고 별도로 축조한 방갈로 형태의 좌대 유료낚시터가 그것인데, 현재 우리 바다 유료낚시터는 양적으론나 질적으론나 빈약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낚시여건이 거의 비슷한 이웃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80년대부터 도심 인근에 조성하기 시작한 일본의 인공 유료낚시터는 대략 다음 몇 가지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예가 고베시 연안에 있는 海づり公園(바다낚시공원)이다. 전철이 다니는 도심지 바닷가에서 가족 단위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한 이곳 낚시 시설물은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뉜다. 연안에서 가장 먼 곳은 가로·세로 100m, 폭 4m인 사각형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그와 연결된 240m 길이의 일자 구조물과 가지처럼 나온 100m 길이의 구조물이 조화를 이룬다. 중앙에는 관리탑이 있으며 그곳에는 레스토랑·매점·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와는 달리, 입구 쪽은 '해양 목장형 낚시터'로서 참돔 등을 가두리 속에 풀어놓은 유료 낚시터가 자리 잡고 있다. 주위의 평균 수심은 13m, 구조물 주변에는 각종 인공어초를 수중에 설치하여 사계절 항상 다양한 어종들이 서

식, 산란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낚시 가능 인원은 550명이며, 총 수용 능력은 760명. 참돔과 같은 고급 어종에서부터 문어낚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낚시를 즐길 수 있으며, 전문 낚시인들을 포함한 가족 동반 놀이객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도심지 휴양 시설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후쿠오카 철제낚시공원 또한 고베시의 낚시공원과 유사하다. 이 공원은 후쿠오카시에서 전철과 버스로 약 1시간가량 소요되는 곳. 모래사장이 발달한 연안으로부터 T자형 철제 구조물(120m와 180m의 낚시터)이 바다 쪽으로 뻗어난 형상인데, 철제 구조물 밑 주변에 다양한 형태의 어초를 설치한 한 것 또한 고오베 낚시공원과 유사하다. 낚시 가능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동계). 입구에 비치해 둔 안내서에는 매년 월별로 이곳에서 잡히는 어종과 최대어 기록, 교통편 등을 꼼꼼히 소개해 두고 있다. 입장료는 낚시의 경우 4시간 기준으로 1,000엔(소인 500엔). 낚시에 필요한 미끼와 간단한 채비는 인근 매점에서 판매한다.

오사카항의 낚시공원은 콘크리트 축장 형태로, 시민들의 휴식처를 겸한다. 여름철이면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러 나온 시민들이 때 맞춰 몰려든 고등어를 낚느라 '더워야 나 몰라'라 한다. 입장료가 없는 무료 낚시터임에도 낚시장소와 난간, 휴지통·세척대·화장실 등, 낚시객과 놀이객들이 아무런 불편이 없을 정도로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다음은 '구획식 인공 유료낚시터' 형태로서 큐슈 쓰구미시의 '인공유료낚시터(山水遊魚센터)'가 그 사례이다. 당초 어항을 만들려던 계획을 변경, 유료낚시터로 개조했는데, 그물로 구획을 나눠 전쟁이를 주어종으로 하는 잡어장, 그리고 참돔장·방어장 등으로 나눠 목적하는 대상어를 선택해 낚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유료낚시터인 만큼 잡은 고기는 무게를 달아 값을 계산하도록 하며, 본인이 원하면 낚은 고기를 회 떠 주기도 한다. 그물 구획이 없는 방파제나 구획 밖에서 낚시는 것은 무료이다.

방파제나 방조제를 축조할 때도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서 위락시설까지 고려하는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바다 유료낚시터 또한 이제는 정부와 지방자치제가 관심을 보일 차례다. 